

만불소득 전후의 경제구조변화 분석

1. 선진국들의 만불소득 달성 시점과의 비교

- 우리나라는 95년중 1인당 GNP가 만불에 도달함에 따라 경상가격 기준으로는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공업국보다 15~17년, 싱가포르, 홍콩, 대만 보다는 3~6년 늦게 만불소득 국가에 진입함.
- 그러나 그 동안의 물가상승으로 미달러화의 구매

력이 하락하여 온 점을 감안하면 이들 국가가 현재의 미달러화 가치로 만불 소득을 달성한 연도는 그보다 훨씬 앞섬.

→ 우리나라의 만불소득 달성시기는 주요 선진국과는 25~50년,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과는 4~12년의 격차가 있게 됨.

* 전자, 자동차 등 첨단부문에서 선진국과의 격차는 크지 않음

〈표-1〉 국별 만불소득 달성년도

국 가	명목만불	현재가치만불 ¹⁾	국 가	명목만불	현재가치만불 ¹⁾
미국	1978	1940년대	아이슬랜드	1978	1971
캐나다	1980	1952	뉴질랜드	1987	1971
스웨덴	1978	1961	일본	1984	1972
스위스	1978	1963	영국	1986	1972
덴마크	1978	1966	오스트리아	1986	1972
룩셈부르크	1978	1966	핀란드	1980	1972
프랑스	1979	1967	이탈리아	1986	1975
호주	1980	1968	스페인	1990	1980
노르웨이	1978	1969	아일랜드	1990	1980
독일	1978	1969	싱가포르	1989	1983
벨기에	1986	1970	홍콩 ²⁾	1989	1986
네덜란드	1979	1971	대만	1992	1991

〈주〉 1) 95년도 미달러화 가치로 환산한 1인당 GNP가 만불수준에 도달한 연도

2) 1인당 GDP기준

나, 종합적인 생활수준은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구매력의 하락을 감안하여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임.

2. 만불소득 달성 당시의 경제모습 비교

(1) 경제성장

- 현재의 미달러화 가치를 기준으로 한 만불 달성년도 이전 6년간 우리나라의 성장률(연 7.8%)은 22개 선행국가* 평균치(연 5.1%)를 크게 상회한 반면 우리의 실업률(연 2.4%)은 이들 국가 평균치(연 3.2%)를 하회함.

* 선정된 분석대상국가를 우리보다 앞선 나라라는 뜻에서 선행국가로 표현하였음.

(2) 물가 및 임금

- 만불년도 이전 6년간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연 6.6%)은 선행국(연 6.1%)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음.
- 그러나 이들 국가중 만불소득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제1차 또는 제2차 석유파동을 겪었던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페인, 싱가포르 등 4개국을 제외할 경우 선행국의 물가상승률이 4.7%에 불과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우리의 물가상승률은 매우 높은 것임.
- 실질임금 상승률도 우리나라(연 8.2%)가 선행국(연 5.1%)보다 크게 높은 수준을 기록함.

(3) 경상수지

- 선행국들은 대부분의 경우 만불 소득 달성 이전 6년간 경상수지 흑자를 보였거나 경상수지 적자의 대 GDP비율이 우리나라(1.41%)보다 낮았음.

(4) 산업구조

- 우리나라는 만불소득에 이르렀던 지난 6년간 선행국에 비해 제조업의 비중이 급격히 위축된 반면 건설업의 비중은 크게 상승* 하였음.

* 제조업 : 6년전 29.2%(29.9%) →

만불년도 26.9%(29.2%)

건설업 : 6년전 11.5%(7.6%) →

만불년도 14.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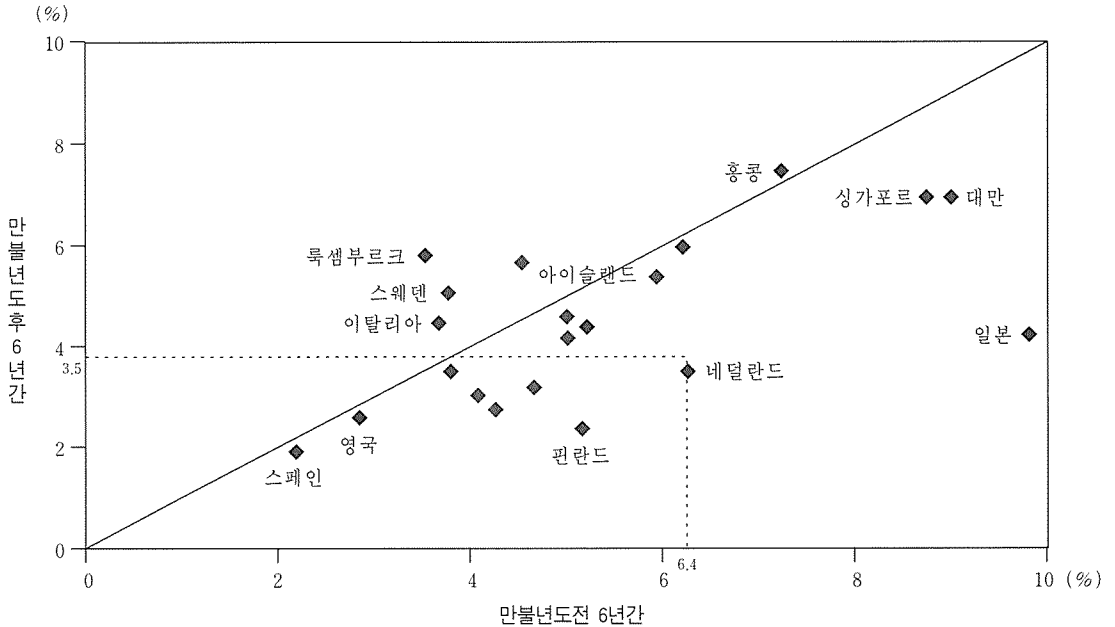
<주> () 내는 선행국가 평균치

(5) 지출구조

- 우리나라 소비의 대 GDP비율(63.3%)은 선행국 평균(73.0%)에 비해 10%p 정도 낮았으며, 투자 비율은 그만큼 높았음.
- 우리나라 소비는 구조면에서 서비스에 대한지출 비중(45.7%)이 선행국(34.5%)에 비하여 크게 높았음.
이는 서비스 요금이 높은 오염세를 보인데다 고속 성장 과정에서 내구재 및 준내구재에 대한 소비가 일단락되면서 소비욕구(needs)가 서비스 부문으로 전이되고 있는 데 따른 것임.
- 또한 소비의 고급화 등으로 교통·통신·교육·문화·오락 등 선택적 소비지출의 비중(55.6%)이 선행국(45.4%)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임.
- 만불년도 6년전 선행국가와 비슷한 수준이었던 수출과 수입의 대 GDP비율은 90년대 이후 대폭 확대된 국내 시장개방과 수출시장 다변화등에 힘입어 만불년도에는 선행국가에 비해 더 높아졌음.

3. 만불 소득 달성 이후 선행국들의 경제운용 실적

〈그림-1〉 국별 만불년도 전후 6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주〉 1) 상기 그림에서 대각선(45° 선) 아래에 있는 점은 만불년도 이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만불년도 이전보다 둔화되었음을 의미함. 즉 네덜란드의 경우 만불년도(1971년) 이후 6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3.5%로서 만불년도 이전 6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6.4%보다 낮아졌음을 나타내고 있음.

(1) 경제성장

- 선행국들의 경우 만불년도 이후 성장률(6년평균 연 4.1%)이 종전(연 5.1%)에 비해 낮아지고 실업률은 높아지는 추세임.
- 특히 만불년도 이전 연 8%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한 싱가포르, 대만, 일본 등 고성장국가들에서 성장률 둔화가 두드러짐.

(2) 물가 및 임금

- 만불년도 이후 선행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연 9.3%)은 70년대에 있었던 두 차례의 유가폭등 및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상승 등에 주로 영향을 받아

종전(6.1%)보다 크게 높아졌음.

- 한편 선행국가군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만불년도 이전 6년간의 연평균 5.1%에서 이후에는 3.8%로 하락함.
- 특히 우리와 같이 임금 고상승국가였던 대만, 일본, 이탈리아, 홍콩, 스페인 등에서 실질임금 상승률의 둔화가 두드러졌음.

(3) 경상수지

- 많은 선행국가들이 만불년도 이후 유가파동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는 성장둔화에 따른 수입수요의 둔화에 힘입어 비교적 견실하였음.
- 만불년도 이후 6년간 19개 선행국의 GDP에 대한

경상수지 적자비율은 0.97%로서 이전(0.98%)과 거의 비슷한 수준임.

- 경상수지를 부문별로 살펴 보면 선행국가 전체적으로 무역수지는 개선되었지만 무역외 및 이전수지는 악화됨.
- 유가파동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적자의 대 GDP 비율은 만불소득 이전의 3.3%에서 이후에는 1.8%로 하락함.
- 만불년도 이전 빈약한 관광 부존자원 및 높은 외채 보유 등으로 무역외수지가 적자를 보였던 나라들은 대체로 만불년도 이후에도 적자규모가 늘어난 반면 대다수의 무역외수지 흑자국은 만불소득 달성 이후에도 흑자기조가 유지되었음.

(4) 산업구조

- 만불년도 이후 선행국가군의 산업구조는 제조업 및 농림어업 비중이 낮아지고 서비스업* 비중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기타 서비스업**의 비중이 상승하였음.
-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등
- ** 전기·가스·수도사업, 정부 및 민간비영리서비스 생산자 등

(5) 지출구조

- 만불소득 달성 이후 선행국가 소비의 대 GDP비율은 73.0%로 종전(73.8%)과 큰 변화가 없었으나 대외개방화의 진전을 반영하여 수출입 비율은 증가세를 유지함.
- 소비지출 중에서는 만불소득 이후 내구재 등 재화에 대한 지출 비중이 낮아진 반면 서비스 비중은 상승함.

- 소비지출을 목적별로 보면 만불소득 이후에도 음식료 등 필수적 소비지출 비중은 하락하였으나 선택적 소비지출 비중은 계속 상승하였음.

4. 시사점

- 우리나라는 지난해 만불소득을 달성하였으나,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미달러화의 가치하락을 감안하여 본 우리의 소득수준은 주요 선진국들과 20년 이상의 격차를 보임.
 - 만불소득을 달성한 시기의 경제모습을 선행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저축·투자율이 높은 반면 고성장, 고인플레이션 및 경상수지적자형 경제체질을 가지고 있음.
 - 특히 만불소득 이후 선진국가들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 앞으로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의 둔화와 실업률의 상승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큼.
 - 고인플레이션 체질로 성장률 둔화에 상응하는 물가안정을 기대하기가 곤란하므로 물가안정을 위하여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
 - 한편 상품경쟁력 약화 외에도 무역외수지 구조상 경상수지의 개선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상존함.
 -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순조롭게 진입하기 위하여는 저성장으로의 이행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대비하는 동시에 통화·재정 등 거시경제정책면에서 일관성 있게 안정화 기조를 유지하여 물가상승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안정시킴으로써 경쟁력 강화의 기반을 다져야 할 것임. ♣
- 〈한은정보〉